

광주 효천2지구 일방통행로 추진 놓고 ‘찬반’

효우2로 26번길 불법 주정차 기승 주민 대부분 찬성·상인 반대 거세 “우회동선 탓 상가 접근성 떨어져” ‘불편 해소’…설득 통한 합의 필요

도로 양쪽을 점령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로에 대해 1개 차선을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1개 차선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반대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았던 행암동 694번지 인근 도로를 기존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했다. 같은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봉선동 용대로 2차선 도로 역시 지난 1일부터 일방통행로 조성에 나서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상 일방통행로 개편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행 불편 발생에 따른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 조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안전이 통과되면 가부 결정을 통해 진행된다. 꾸준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이동주차 등의 조치에도 효과가 없으면 일방통행로 개편을 시행한다.

올해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온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도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의 찬성에도, 상가 임차인들의 반대가 심해 관할기관인 남구와 남부경찰은 일방통행로 전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후 찾은 광주 남구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도로는 양쪽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해 쌍방향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남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방통행로 조성이 끝난 행암동 도로의 경우 실질적인 주차 공간이 생겨 상가 임차인들이 좋아하고 불법주정차 수가 줄면서 교통도 원활해져 민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천2지구 도로는 일방통행 개편이 이뤄지면 우회동선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상가 임차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교통체계를 주관하는 남부경찰은 일방통행로 조성은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상가 주차장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 일방통행로 조성 계획이 수립될 때 상인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이 심하다”며 “찬반 대립이 심할 경우 관할기관이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1일 찾은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인근 상가 상인들은 찾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과 일방통행로 조성으로 우회동선이 길어져 손님들의 상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에 2번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온다. 손님들이 식사하러 왔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최근 단속이 잦아지면서 저녁에 식당을 찾던 손님 수가 현격히 줄었다. 교통 편의를 위해 단속은 필요하지만 과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도교육청,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 대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를 배치하고, 피해 교원 법률상담 및 심리적 회복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노조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보호센터 강화로 피해 교원 지원 확대,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지원청 지원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

사 및 상담사 배치 △피해 교원 법률상담 및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지원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민원면담실 지정 및 구축, 녹음 가능한 전화기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원해 교원들을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호범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TF에서 수립한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현장 교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제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새벽엔 폭우·낮엔 폭염’… 변덕 심한 날씨 지속

‘야행성 폭우’ 하층제트기류 탓 “날씨 정보 수시로 확인해야”

새벽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는 ‘야행성 폭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지역은 지난 20일 밤부터 여러 차례 낙뢰가 발생하는 등 강한 비가 2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내린 강수량은 37.1mm, 21일은 6.8mm다.

하지만 21일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최고기온이 32.1도까지 올라 폭염이 다시 찾아왔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총 강수량 28.4mm의 강한 비가 오전에 쏟아졌지만, 오후에

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날씨를 보였다. 이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는 원인은 ‘하층제트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층제트기류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현상이다.

낮에는 지상의 기온이 올라 하층 공기가 상승하는 난류가 발생하는데 이 난류로 인해 하층제트기류는 내륙 도달이 어렵다. 하지만 밤에는 지상 기온이 낮아져 난류가 약화돼 하층제트기류가 내륙까지 진입할 수 있는데 이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장마가 이어지는 이유로는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겹치는 현상이 예년보다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남북으로 넓게 이동하며 고루 비가 내리게 했던 일명 ‘한국형 장마’의 장마전선 자리를 불규칙한 저기압이 채우면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비가 내린 뒤에는 저기압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 폭염이 나타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날씨의 변동 사항이 큰 만큼 기상 상황을 실시간 정보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강한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12시~6시 30분 사이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박찬 기자

GGM, 노조위원장 징계 놓고 노사 대립

노조 “노사 탄압…상생 견어차” 사측 “부서장에 폭언, 명예훼손”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노조 측은 “노사 상생을 견어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 지회장이 라인작업자의 간이지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기아·현대 등 완성차 업체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가 없는 곳이 있는데 이를 항의하자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 불복종 등 이유를 들어 정직 처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GGM은 노조의 주장을,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GGM은 “김 지회장의 징계는 부서장에게 폭언, 다른 사원의 명예를 훼손,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징계”라고 해명했다.

박찬 기자

‘뇌물수수·해외 도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 대가

광주시교육청의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증인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증언으로 충분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2400만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이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 과정 전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된 사업 관련 문건 등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사업 대상으

로 선정된 모 사립유치원 내 운영회의록 조작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일러주거나 관련 행정 절차에 도움도 줬다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 외부 평가위원 지위에서 사업 선정 순서 등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지 등을 잘 살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선고 재판은 8월1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김은지 기자